

뉴스 빅데이터로 본 ‘사립유치원 비리’

## ‘정부의 역할’ 강조한 언론 보도 프레임

정재관 /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DCRC) 책임연구원

누가 뭐래도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스타는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을 유용한 1,878개 유치원의 비리 내역 5,951건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른바 ‘비리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빠르게 확산되어 이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여 개의 비리유치원 관련 청원 글이 게재됐다.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비리 논쟁은 지난 한 달간 박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및 처벌 요구와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발이 이어지며 기형적인 사학법 논란, 재산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장 등 새로운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11월 9일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 역대 최단기간 통과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2일 국회 법사위 통과가 불발되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얹힌 만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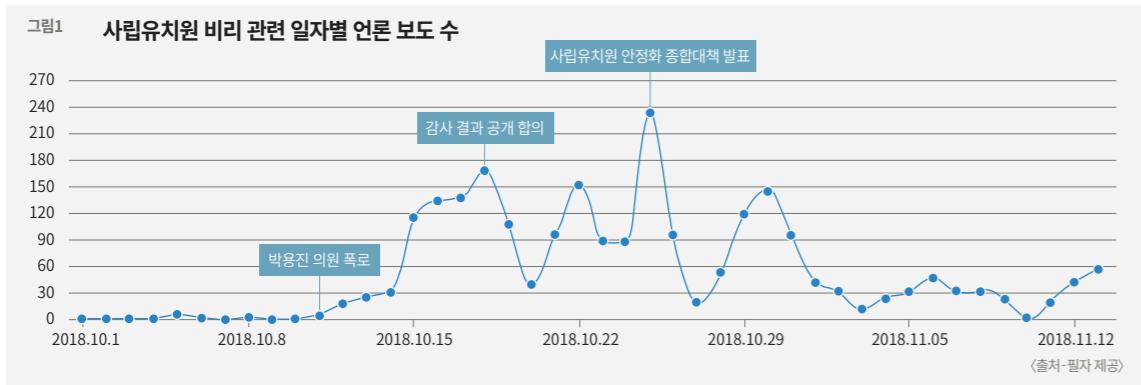
### 사립유치원 비리, 10월 한 달간 언론의 주요 이슈

‘사립유치원 비리는 언론에서 손대지 못하던 성역’이라거나 ‘정부와 언론 모두 사립유치원 사건에 대해 좌편향되었다’라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를 공공

여론의 한가운데로 격상시킨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제공한 ‘주간 이슈’ 분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이슈는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다뤄진 뉴스의 상위권을 늘 유지했다.

박용진 의원이 처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흘 후인 10월 14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이슈는 첫 5위권에 진입하며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10월 16일에는 한 계단 상승한 4위로 오르더니 다음 날인 17일부터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첫 번째 이슈로 기록되며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이 10월 한 달간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부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뉴스를 빅카인즈에서 검색해보면 2018년 10월 이후 총 2,548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림1]에서 보듯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19건의 보도를 시작으로 전국시도부 교육감회의에서 실명을 포함한 감사 결과 공개를 합의한 10월 18일 166건의 언론 보도가 검색되었다. 또한 당정(黨政)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어 국공립 유치원 40% 취원율 조기 달성을 국공립학교에 사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10월 25일 233건의 언론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골자마다 언론이 정보와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사립유치원 비리의 최대 키워드는 ‘학부모’

이번 사립유치원 이슈에서 주로 다뤄진 담론을 키워드별로 들여다보면, 언론은 사립유치원 비정상 운영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회계규칙’을 수립하고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교육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 정책의 일선에는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의 시도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중심으로 ‘회계감사’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과 같이 사립유치원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번 이슈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림2]

검색된 2,548건의 뉴스에서 언급된 주요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뉴스에서 토픽을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방법 중 하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보았다. LDA는 검색된 뉴스의 내용을 종합·분석해 뉴스에서 주요 주제(Topic)를 추출하고, 해당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제시하는 텍스트 분석 방법 중 하나다.

###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의 4대 주제는

#### ‘학부모’, ‘한유총’, ‘정부부처’와 ‘전개과정’

[그림3]을 보면, ‘국정감사’와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회계감사’, ‘종합대책’, ‘누리과정’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이른바 사립유치원 전개과정이 첫 번째 주제로 추출되었다. 이 주제에서는 ‘한유총’의 ‘비리’와 ‘박용진’ 의원의 ‘국정감사’,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회계감사’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과 같이 사립유치원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 키워드로 이슈의 전개과정을 폭넓게 서술하고 있으나 특정 쟁점, 혹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주제가 추출되지 않아 키워드 간의 관계성(0.05~0.1)은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번째 주제는 학부모와 연관된 키워드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학부모(핵심 키워드이기도 한)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는 ‘종합대책’, ‘국공립유치원’, ‘간담회’, ‘정상화’, ‘실명공개’, ‘회계감사’ 등이다. 이 키워드는 학부모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바라는 주요 대책과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난 한 달여간 언론 보도의 한 축이 학부모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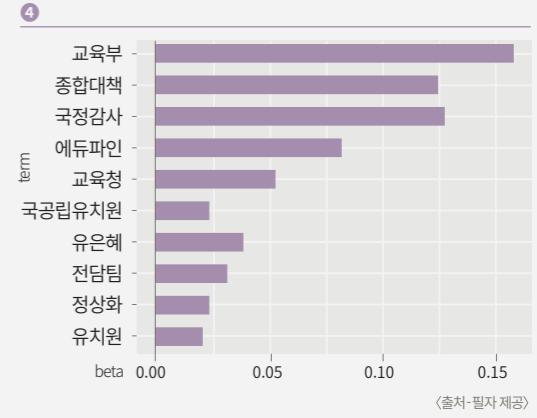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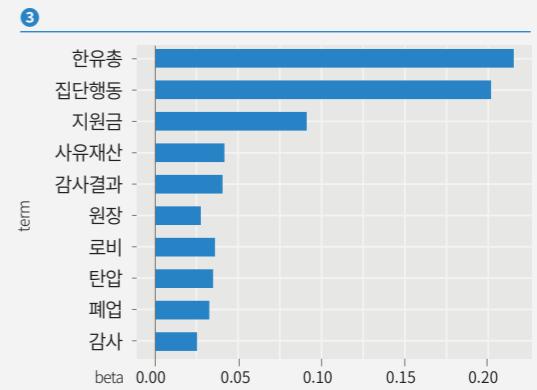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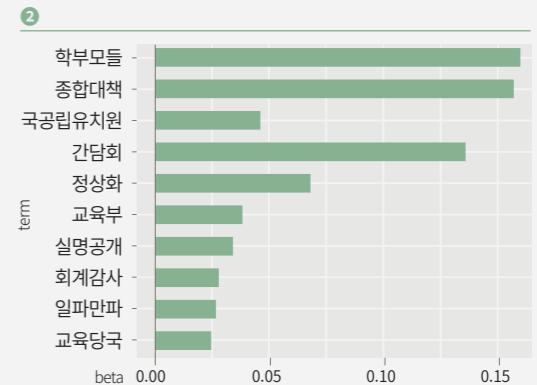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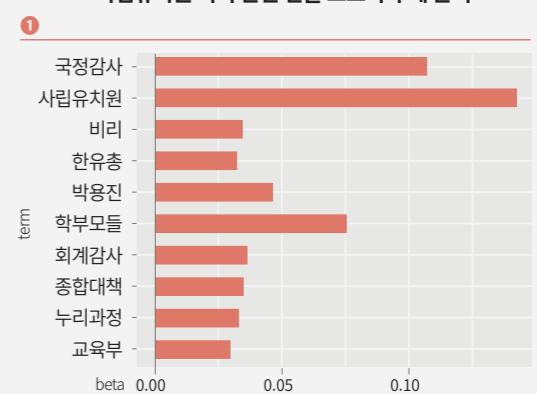
세 번째 주제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인 한유총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키워드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큰 축으로 보조금과 ‘지원금’ 논란, ‘사유재산’, ‘탄압’과 같은 한유총의 주장, ‘폐업’, ‘로비’ 등의 행동이 해당 주제의 핵심 키워드다.

마지막 주제는 정부부처의 구성원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와 ‘전담팀’ 구성 등의 활동을 통해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활동 내역이 네 번째 주제의 키워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용진 의원이 처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흘 후인 10월 14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이슈는 ‘주간 이슈’ 첫 5위권에 진입하며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 중심에 있던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의 한희유치원. ©news1

**그림3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언론 보도의 주제 분석**



## 학부모 vs. 한유총, 조율하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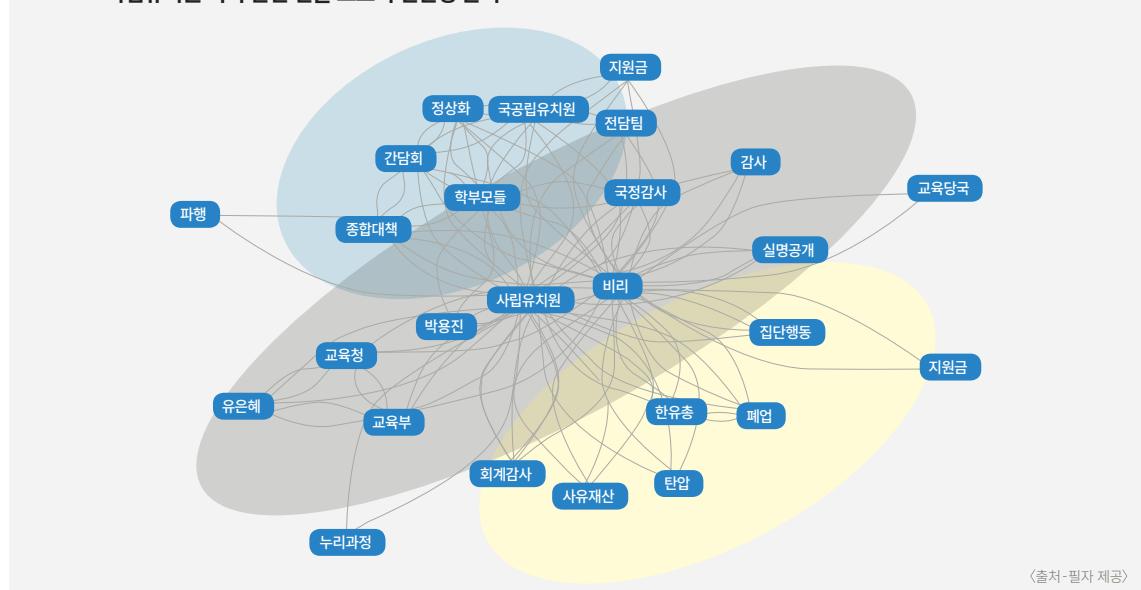
그렇다면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관련 주제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의미를 구성하는지 파악하면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의 현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R를 이용해 연관성 분석을 실시했다. 연관성 분석은 추출된 키워드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두 키워드가 기사에서 같이 언급되는 비율이 높다면 그림에서 가까운 거리에 놓이며 선으로 연결된다.

[그림4]의 파란 원에서 보듯 추출된 키워드는 ‘사립유치원’과 ‘비리’라는 중심 단어를 주축으로 학부모와 연관된 담론(‘간담회’, ‘정상화’, ‘종합대책’)이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반대편 노란 원은 한유총을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집단행동’, ‘폐업’, ‘사유재산’, ‘탄압’)를 표현한다. 이렇듯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양극단에서 대치하며 독립적인 쟁점 이슈를 구축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관계자 및 부처와 관련된 이슈가 두 집단 간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회색 원 참조). 다시 말해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의 프레임은 정부를 두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지점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관성 분석에 사용된 그림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은 두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보도 균형은 물론 정부의 역할 또한 잘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의 이른바 사립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 머물러 있지만, 11월 14일 국회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는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빅카인즈를 통해 분석된 언론 보도는 사회 쟁점을 정책 수렴 과정으로 연결하는 건강한 여론 형성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단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는 쟁점을 두고 대치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를 통해 공중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렴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 과정을 통해 원만하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그림4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언론 보도의 연관성 분석



〈출처-필자 제공〉